

김지용 청문회… 과거 기소엔 해명, 정치검찰엔 소신 발언

(중수청장 후보자)

범여권, 검찰개혁 의지 집중 질의
野, 정치적 중립성·소신 검증
후보자 “직무 수행에 문제 없어”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지용 중대범죄 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과 정치적 독립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범여권은 과거 주요 사건의 기소를 맡았던 김 후보자가 기소를 반대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집중 추궁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소신과 정치적 중립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정치검찰의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조국혁신당, 과거 기소 관여 경위·검찰개혁 의지 추궁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정진운 검사의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김 후보자를 압박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시

했다. 정 검사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윤 의원은 “당시 검찰부장 명점식은 어느 누구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후보자의 말이 맞는지 명점식의 말이 맞는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기소에는 반대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이후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했는지도 물었다. 김 후보자가 당시 관련 자료를 요구받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요구가 없더라도 후보자가 반대 의사를 갖고 있었으면 당연히 내는 게 원

칙”이라고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담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마음속으로만 반대하면 모든 게 반대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마음속으로만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이 전 비서관의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도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이행할 적임자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춘생 의원은 “윤석열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연대했던 많은 국민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며 “왜 김지용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못 찾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기소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도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저에게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

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김지용, 국민의힘의 ‘정치검찰’ 질문에 ‘윤석열·한동훈’ 거론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리로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박덕흠 의원은 소수의 정치검찰 때문에 검찰 조직이 와해됐다고 주장하며 “정치검찰 1호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는 제일 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의원도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자신이 중수청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국힘 “한미동맹 회복하려면 정동영 경질”

대통령 ‘자주적 실용외교’ 강조에
한미동맹 위기로 앞세워 반발

국민의힘이 연일 ‘한미동맹 위기론’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자주적 실용외교’ 노선을 강조하며 현 외교·안보라인 유지에 무게를 두자, 국민의힘의 ‘투 투’인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13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당장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

특히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관계의 균열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정동영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 등 ‘지주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굴종’으로 규정하며, 한미동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시

맹에 균열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알맹이 빠진 껍데기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결의안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대북 지원 재검토 조항이 빠졌다면 “북한이 지뢰 깔고 미사일을 쏘도 군말 없이 돈 갖다바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15일로 예정된 신남북강대교 개통과 지난 11일 쿼렌코프 러시아 비상 사태부 장관의 방북을 두고 북중러가 빠르게 밀착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북한에는 ‘굴종’하고 중국에는 ‘사대’하면서 미국에만 ‘지주’를 외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국정

감사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아직도 정동영 팬클럽 대표 작함을 들고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 정 장관을 경질하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은 한미동맹 회복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동영 장관이 지난 12일 “한미동맹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합참의장과 주미대사까지 인정하는 한미갈등을 정 장관 혼자만 부인한다. 국방부가 인정한 북한의 침략행위 역시 정 장관 혼자만 부인한다”며 “가짜 평화 망상에 빠져 있으니 헛것이 보이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정보 공유 문제가 한미동맹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정 장관의 존재가 한미동맹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최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대체 누가 미국에 굴종하라고 했냐”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굴종도 사대도 아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흔들림 없이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 syj@

李 “인구변화 맞춰 사회 구조 재설계”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인구전략위원회 출범해 범정부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들을 확충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며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서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이주민 증가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인구정책의 기조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며 인구전략위원회에 결혼·출생·양육 문제와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 노동 환경 질적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범정부 인구정책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위)를 출범했다. 인구위는 지난달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대·개편된 조직이다.

인구위는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인구비전을 선포하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된 후 수립된 첫 계획이다. 향후 5년을 인구변화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지방소멸 위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전략의 방향이 담겼다.

이날 인구위는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지표로는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시했다. /서예진 기자

민주당, 신천지 가입 의혹 후속 조치 착수

규모·경위 규명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조사를 거쳐 지도부에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대표는 이를 뒷받침할 증언도 관련 기구에서 확보했다고 말해, 후속 조치와 이를 둘러싼 당 내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TV 유튜브의 코너 ‘민티07’에 출연해 최고위가 관련 기구로부터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정황

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에 따르면, 상당한 수의 신천지 교인들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정황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증언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3만~5만명 가량으로 보고된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수치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의혹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생각이다. 후속조치에는 당 차원의 조사를 넘어 수사 의뢰까지 검토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선원(이종 당적, 유령 당원, 비자발적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 단장이 구체적 최종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최고위원들이 공유한 후 이에 바탕해 의원총회 공개를 포함한 후속 처리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만약, 신천지 교인의 대규모 당원 가입이 있었다면 가입 규모, 가입 시점, 특정 후보 지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민의힘, 민생 해결사 ‘당근위’ 출범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국민의힘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자당 중앙당사에서 ‘당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당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만든 위원회 중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 갖고 만든 위원회는 이 당근위원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근위는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총 45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 기구로, ‘당신의 근심을 국민의힘이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당근위 위원장인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기대를 실제 성과로 바꿔야 한다”며 “(당근위는) 집값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잠 못 이루는 국민의 근심을 해결하는 민생경제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했다. /박경수 기자